

2023년 11월 4일 시행

# 2023년 소방위 승진시험

응시번호	
성명	

## 【 시험 과목 】

편철순서	제 1 과목	제 2 과목	제 3 과목
과 목 명	행정법	소방법령Ⅳ	소방전술

### 응시자 준수사항

☞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 감독관 또는 방송’의 안내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지 표지의 ‘응시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시험을 시작하면 시험지의 ‘편철 순서’, ‘페이지 수량’, ‘인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문제를 푸십시오.  
※ 본 시험지는 모두 14쪽입니다.
3. 시험을 시작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고,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정답을 하나만 고르십시오. 운영요원에게 문제 내용에 관한 질문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 【 행정법 】

## 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 ② 과세관청이 결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추상적으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로 볼 수 없다.
- ③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대상이어야 하므로, 묵시적인 표시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명시적인 표시가 있었을 것을 요한다.
- ④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기본법」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
- ③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불일 수 없게 된 경우, 곧바로 위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 3. 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훈장 수여 등 서훈수여 처분의 경우, 유족 등 제3자는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망인을 대신하여 단지 사실행위로서 훈장 등을 교부받거나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 ② 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 이송처분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처분개념인 ‘공권력행사’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③ 교도소장이 수행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지정행위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④ 부실기업의 정리와 관련하여 주거래은행의 의사를 지원·독려하는 정부의 행위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개념인 ‘공권력행사’에 해당된다.

## 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절차법」은 의무적 신고를 규정하고,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②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 ③ 「행정기본법」에는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다.
- ④ 인·허가적 성격 또는 등록적 성격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나,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다.

## 5.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이다.
- ②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된다.
- ③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 ④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행정법 】

6. 「행정기본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7. 행정청의 재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제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②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 마땅히 고려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고려대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③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 ④ 경찰공무원이 담당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과 양주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무고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위 징계사유 중 금품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당초의 해임처분을 유지할 수는 없다.

8.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수소법원은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시정보완명령을 구술로 고지하였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 ③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정명령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면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
- ④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9.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거나 또는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②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 ③ 일반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 【 행정법 】

10.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또는 명백하여야 하고, 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의미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 ②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당연무효인 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 ④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 있다.

1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단순 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불가능하고,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 ② 취소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이 내려진 경우, 후소인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 ③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과세처분 이후 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면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12. 「행정기본법」상 철회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3. 행정처분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경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 ②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의 변경은 간소한 절차를 따른다.
  - ③ 종전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장래효만을 가진다.
  - ④ 일부만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종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5. 「행정규제기본법」상 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②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하고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는 제외된다.
- ③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④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에 의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 행정법 】

16.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② 토지나 건물의 인도 의무는 사람이 그 신체로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여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신체에 대한 직접강제를 필요로 하고, 대집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대집행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 ④ 대집행절차를 이루는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실행·비용납부명령은 상호 결합하여 대집행이라는 효과를 완성시키기 때문에 선행행위의 하자는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17.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접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국가배상청구만 가능하다.
  - ②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강제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강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강제수단이다.
  - ④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18.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② 국제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가능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
  - ③ 세관공무원이 밀수품을 신고 왔다는 정보에 의하여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하여 수색을 하려면 비록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었더라도 이와 별개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④ 부가가치세액 재경정처분은 이미 피고가 행한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시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19.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태료의 부과에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②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객관적 법 위반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20. 「국가배상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 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1.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법률이 재산권침해를 규정하면서 보상에 관하여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유사한 재산권침해를 규정하면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한 관련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②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법리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 ③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다.
  - ④ 대법원은 손실보상청구권을 사권(私權)으로 보고, 그에 관한 소송도 민사소송에 의한다고 하였다.

## 【 행정법 】

22. 「행정심판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④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3. 「행정소송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③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4. 행정청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피대리 행정청에 있다.
- ②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입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③ 도지사 등은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입된 권한을 시장, 군수 등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청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상실하고 그 사항은 수입청의 권한으로 되므로 처분을 위임청의 명의로 하였더라도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수입청에게 있다.

25. 「국가공무원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④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 소방법령Ⅳ 】

1. 「소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 소속 소방감인 소방본부장의 전보는 대통령이 실시한다.
- ② 시·도 소속 소방준감인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과 지방학교장은 제외한다)의 전보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 ③ 시·도 소속 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의 전보는 소방청장의 위임을 받아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 ④ 시·도 소방서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소방서 내에서의 전보는 시·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소방서장이 실시한다.

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심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2회 이상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 ②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 ③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의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는 소방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상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 ③ 근무성적을 '가' 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 ④ 소방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4.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특별승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정감인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을 소방총감으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 ②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 ③ 특별승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④ 천재·지변·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1계급 특별승진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소방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에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 소방법령Ⅳ 】

6.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상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조정결과, 조정 전의 평정 등급에서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평균점으로 한다.
- ②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는 피평정자의 상위직급 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 가 )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 부터 ( 나 )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 부터 ( 다 )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 |      | 가    | 나    | 다    |
|------|------|------|------|
| ① 정직 | 18개월 | 6개월  | 6개월  |
| ② 강등 | 18개월 | 12개월 | 12개월 |
| ③ 강등 | 18개월 | 6개월  | 6개월  |
| ④ 감봉 | 12개월 | 6개월  | 6개월  |

8. 「공무원고충처리규정」상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 민간위원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공무원으로 15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② 대학에서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교수로 퇴직한 사람
- ③ 공인노무사로 3년 근무한 사람
-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9.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상 국내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 의무복무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임용제청권자는 ( 가 )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 나 )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 |       | 가  | 나  |
|-------|----|----|
| ① 3개월 | 3년 | 3년 |
| ② 3개월 | 6년 | 6년 |
| ③ 6개월 | 3년 | 3년 |
| ④ 6개월 | 6년 | 6년 |

10.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상 가점평정하는 경우 최대 초과할 수 없는 가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0.5점
- ②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 : 3.0점
- ③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 2.0점
- ④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한 경우 : 0.5점

11. 「공무원보수규정」상 승급의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소방공무원은? (단,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한 가산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① 강등의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24개월이 되는 소방공무원
- ② 정직의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되는 소방공무원
- ③ 감봉의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소방공무원
- ④ 전책의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소방공무원

# 【 소방법령Ⅳ 】

12. 「소방공무원 징계령」상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징계위원회 관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 중앙소방학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 나.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 다. 소방체험관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 소방체험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 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 ③ 다                                      ④ 라

1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임용 구분별 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각 50퍼센트로 한다.
- ②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 특별승진 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에는 당초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뺀 인원수를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로 한다.
- ③ 소방위로의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소방위로의 승진 임용예정인원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 ④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25퍼센트 이내로 한다.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설치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50만리터 이상의 옥내탱크저장소 : 기초·지반 및 탱크 본체의 설계도서
- ② 암반탱크저장소 : 탱크본체·경도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 ③ 지중탱크인 옥외탱크저장소 :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 본체의 설계도서
- ④ 해상탱크인 옥외탱크저장소 :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0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③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 ④ 300 m를 초과하는 위험물 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1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차	2차	3차
①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②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③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④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특정·준특정옥외탱크 저장소의 정기검사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에 1회 정밀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이내에 1회 정밀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1회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1회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포수용액 방사차 :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 ℓ 이상일 것
- ② 포수용액 방사차 : 10만 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 ③ 분말방사차 :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 kg 이상일 것
- ④ 분말방사차 : 1,200 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 【 소방법령Ⅳ 】

1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속 소방공무원
- ②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③ 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④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원인·피해조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군용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군사목적에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은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공사를 착수한 후 그 공사의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국가안보상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군부대의 장이 설치하려는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협의한 경우에는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군부대의 장은 시·도지사 및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250만원
- ②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 300만원
- ③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00만원
- ④ 허위로 신고한 경우 : 500만원

2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③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안전관리자의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2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의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조소는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②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인 제조소가 보유해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5미터 이상이다.
- ③ 주유취급소 및 판매취급소에는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④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보유공지의 너비를 기산한다.

## 【 소방법령Ⅳ 】

25. 「위험물안전관리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여야 한다.
- ② 배출설비의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해야 한다.
- ③ 제조소의 위험물취급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수 없다.
- ④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해야 한다.

# 【 소방전술 】

1. 소방활동 검토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19안전센터에서는 본부 및 소방서 검토회의 대상을 제외하고 즉소화재를 포함하여 매 건마다 실시한다.
- ② 중요화재, 특수화재의 경우 통제관은 관할 소방서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이 할 수 있다.
- ③ 건물의 구조별 도시방법은 목조는 녹색, 방화조는 황색, 내화조는 적색으로 표시한다.
- ④ 소방활동도에는 부근의 도로, 소방용수, 펌프부서 및 수관 연장 방향 등을 기입한다.

2. 화재현장 지휘·통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진지휘는 배연, 검색구조, 내부 소방호스 관리 등과 같은 실제임무를 이행하는 단위지휘관이 사용 가능한 형태이다.
- ② 전략수준은 전술수준에서 결정된 각 목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준이다.
- ③ 분대 편성 시 임무별 명명법에는 지붕소대, 진압소대, 배연소대, 구조소대, 대피소대 등이 있다.
- ④ 분대 편성의 이점으로 현장지휘관의 통솔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3. 파괴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스절단기 사용 시 절단물의 측면에서 화구가 절단부를 향해 가열한다.
- ② 철근콘크리트조 바닥의 파괴 목적이 주수를 위한 개구부일 경우 바닥의 철근이 노출되면 와이어커터 또는 가스절단기로 반드시 절단한다.
- ③ 판유리의 파괴순서는 유리의 중량을 고려하여 윗부분부터 종 방향으로 파괴한다.
- ④ 파이프셔터의 파괴 시 동력절단기에 의한 절단은 가이드레일에 가까운 곳을 선정한다.

4.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중 초고층건물 화재 현장대응 절차를 서술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화점층이 고층인 경우 소방대는 비상용승강기를 화재층을 기점으로 3층 이하까지 이용, 화점층 진입은 옥내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활용한다.
- ② 거주자 피난유도 시 15층마다 설치된 피난 및 안전구역으로 대피 유도한다.
- ③ 발화층이 2층 이상인 경우 연결송수관 활용, 내부 수관 연장은 소방대 전용방수구에서 연장한다.
- ④ 화점의 직상층 계단 또는 직상층에 경계팀 배치, 진입팀의 활동거점은 화점층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에 확보한다.

5. 재해(사고)발생 이론 중 하인리히(H.W.Heinrich) 이론과 버드(Frank Bird) 이론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어의 부족 → 기본원인 → 직접원인 → 사고 → 재해 손실 5단계로 설명한 것은 버드의 재해연쇄이론이다.
- ② 버드 이론 중 기계설비의 결함, 작업체제 등은 기본원인에 해당한다.
- ③ '1:29:300의 법칙'으로 재해구성비율을 설명한 이론은 하인리히 이론이다.
- ④ 하인리히 이론에서는 기본원인만 제거하면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6. 안전교육의 방법 중 사례연구법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해도 측정이 용이하다.
- ②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 ③ 생각하는 학습 교류가 가능하다.
- ④ 현실적인 문제의 학습이 가능하다.

7. 분진폭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소속도나 폭발압력은 가스폭발에 비교하여 작으나 연소시간이 길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파괴력과 타는 정도가 크다. 즉, 발생하는 총 에너지는 가스폭발의 수백 배이고 온도는 2,000~3,000℃까지 올라간다.
- ② 최대 폭발압력 상승속도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증가하는데 이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확산과 발화가 쉽기 때문이다.
- ③ 폭발성분진의 종류 중 금속류에는 Al, Mg, Zn, Fe, Ni, Si 등이 있고, 목질류에는 목분, 콜크분, 리그닌분, 종이가루 등이 있다.
- ④ 입자표면적이 공기(산소)에 대하여 활성이 있는 경우 폭로시간이 짧아질수록 폭발성이 낮아진다.

# 【 소방전술 】

8. 위험물의 연소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적린은 연소 시 오산화인의 흰 연기가 발생한다.  
 나. 유탄은 연소 시 푸른 불꽃을 내며 이산화황을 발생한다.  
 다. 인화아연은 연소 시 가연성·맹독성의 포스핀가스를 발생한다.  
 라. 디에틸알루미늄클로라이드는 연소 시 이산화질소를 발생한다.

- ① 가, 나
- ② 나, 다
- ③ 가, 나, 다
- ④ 가, 다, 라

9. 건물 붕괴 위험성 평가의 3가지 요소인 벽, 골조(기둥과 대들보), 바닥층 중 가장 위험한 붕괴 요인이 벽인 건물 구조로 짝 지어진 것은?

- ① 경량 목구조, 조적조
- ② 중량 목구조, 경량 목구조
- ③ 내화구조, 준 내화구조
- ④ 준 내화구조, 중량 목구조

10. 다음에서 설명하는 잠수병으로 옳은 것은?

압력이 높은 해저에서 압력이 낮은 수면으로 상승할 때 호흡을 멈추고 있으면 폐 속의 공기는 팽창하고 결국에는 폐포를 손상시키며, 공기가 폐에서 혈관계에 들어가 혈관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장기에 기능 부전을 일으켜 발생하는 질환

- ① 산소중독
- ② 공기색전증
- ③ 감압병
- ④ 탄산가스 중독

11. 소방대원이 화재현장 검색 및 구조활동 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화재건물 속에 갇히거나 길을 잃었을 경우 취하여야 할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향을 잃은 대원은 침착함을 유지하여 흥분과 공포감으로 인한 공기소모를 방지해야 한다.
- ② 창문이 있다면 창턱에 걸터앉아서 인명구조경보기를 틀거나 손전등 또는 팔을 흔들어 지원요청 신호를 보낼 수 있다.
- ③ 이동할 수 없을 만큼의 부상을 입었다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장비들을 포기하여야 한다.
- ④ 다른 대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탈출할 경우 수관 커플링의 결합부위를 찾아서 암커플링이 향하는 방향으로 기어서 탈출한다.

12.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비로 옳은 것은?

지진과 건물붕괴 등 인명피해가 큰 재난 상황에서 구조자가 생존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장비로 일명 써치탭(Search TAP)이라고 한다.

- ① 고성능 영상탐지기
- ② 매몰자 전파탐지기
- ③ 매몰자 음향탐지기
- ④ 매몰자 영상탐지기

13. 수중구조 시 잠수에 사용하는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면에서 하강하여 최대수심에서 활동하다가 상승을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을 '실제 잠수시간'이라 한다.
- ② 체내의 잔류 질소량을 잠수하고자 하는 수심에 따라 결정되는 시간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을 '잔류 질소시간'이라 한다.
- ③ 스쿠버 잠수 후 10분 이후에서부터 15시간 내에 실행되는 스쿠버 잠수를 '재 잠수'라 한다.
- ④ 이전 잠수로 인해 줄어든 시간(잔류 질소시간)과 실제 재 잠수 시간을 합하여 나타낸 것을 '총 잠수시간'이라 한다.

14. 위험요인의 회피 능력배양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적 위험요인 통제능력
- ② 외적 위험요인 예지능력
- ③ 배우고 익히는 숙지능력
- ④ 행동으로 실행하는 능력

# 【 소방전술 】

15. 구조활동의 원칙에서 명령통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 대원은 오직 한 사람의 지휘관에게만 보고하고 한 사람의 지휘만을 받는다는 것이다.
- ② 현장을 장악한 현장지휘관의 판단 하에 엄정한 규율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부대활동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자의적인 단독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 ③ 현장에서 긴급히 대원을 철수하는 등 급박한 경우라도 반드시 명령통일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명령계통에 있지 않은 대원에게 지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한다.

16.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GHS) 위험성 표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산화성
- ②  폭발성
- ③  자극성
- ④  환경 유해성

17.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 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 ② 중앙소방학교장은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 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제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18. 다수사상자 발생현장에서 호흡이 없는 30대 남성의 기도를 다시 개방했더니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 환자의 STRAT 분류법으로 옳은 것은?

- ① 긴급
- ② 응급
- ③ 비응급
- ④ 지연

19. 허벅지에 깊은 열상이 발생하여 직접 압박에도 지혈이 되지 않아 지혈대를 사용하고자 한다. 지혈대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철사나 밧줄을 사용한다.
- ② 말초부위 순환이 되도록 간헐적으로 풀어준다.
- ③ 관절 위에 적용한다.
- ④ 출혈이 멈추면 막대가 풀려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0. 출혈로 인해 혈액량이 감소될 경우 인체의 초기 보상 작용으로 나타나는 순환계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 ① 혈관이 수축하고, 맥박이 빨라진다.
- ② 혈관이 이완하고, 맥박이 빨라진다.
- ③ 혈관이 수축하고, 맥박이 느려진다.
- ④ 혈관이 이완하고, 맥박이 느려진다.

21. 부목고정의 기본원칙으로 옳은 것은?

- ① 뼈가 손상부위 밖으로 나와 있으면 원래 위치로 넣는다.
- ② 관절부위 손상은 위-아래 뼈를 고정해야 한다.
- ③ 쇼크의 징후가 보여도 먼저 완벽하게 부목으로 고정 한 후 이송한다.
- ④ 손끝 및 발끝은 노출이 되지 않게 부목을 적용한다.

22.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와 얼굴부위에 심한 충격으로 척추손상이 의심되고, 이마에 결출상과 코에 출혈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척추고정에 방해가 되어 헬멧을 제거하였다.
- ② 목뼈 손상이 의심되어 턱 밀어올리기 방법으로 기도를 개방하였다.
- ③ 의식장애 환자는 경추를 고정하고 편안하게 회복자세를 취해주었다.
- ④ 결손된 피부가 발견되어 접합수술을 위해 병원으로 함께 이송하였다.

23. 고혈당 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부는 따뜻하고 건조하다.
- ② 호흡에서 아세톤 냄새가 나기도 한다.
- ③ 보통은 저혈당 환자에 비해 증상의 시작이 서서히 진행된다.
- ④ 인슐린 복용 후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 【 소방전술 】

24. 무더운 여름 날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던 50대 여성의 의식이 혼미하며 피부가 뜨겁고 건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자의 처치로 옳은 것은?

- ① 이온음료를 마시게 한다.
- ② 저체온이 발생하지 않게 구급차를 따뜻하게 해준다.
- ③ 환자의 몸을 축축하게 해주고 부채질을 해준다.
- ④ 가온된 산소를 공급한다.

25. 분만 후 신생아의 처치로 옳은 것은?

- ① 탯줄은 축축한 멸균거즈로 감싸서 건조되는 것을 방지한다.
- ② 신생아 소생술 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5:2로 한다.
- ③ 구형 흡인기를 신생아의 입에 넣고 누른 다음 흡인을 2~3회 반복한다.
- ④ 첫 번째 탯줄결찰(제대결찰)은 신생아로부터 약 5cm 정도 떨어져 결찰한다.

수고하셨습니다.